

주간동향 [2006. 8.24~8.30]

강민정

 본원 전문연구원
 02-3156-7137
 kwdi_trends@kwdi.re.kr

- ❖ 법무부, 결혼 이민자 네트워크 구축
- ❖ 중소기업청, 성인지적 중소기업정책 추진
- ❖ 정부, 원정 성매매 수사 전담팀 구성 검토
- ❖ 중앙인사위원회, 2005 균형인사지수 평가결과 발표
- ❖ 통계청, 2005 출생·사망통계 결과 발표
- ❖ 대기업 여직원, 여성 CEO 전망 불투명

❖ 법무부, 결혼 이민자 네트워크 구축

8월 29일 법무부의 국민의 외국인배우자 체류현황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중 60%가 중국인이고 베트남인과 일본인이 그 뒤를 이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7월 말 현재 8만 6천499명의 외국 국적 배우자 중 5만 2천299명(60%)이 중국 국적 소유자였고, 베트남 1만 2천80명(14%), 일본 6천921명(8%)으로 3개국 국민이 전체 8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필리핀 국적 4천143명(5%), 태국(1천527명, 2%), 몽골(1천475명, 2%), 미국(1천279명, 1%), 기타(6천775명, 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민자 가족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마다 국적별·지역별 결혼 이민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우선 지역별로 결혼이민자 상호간 대화를 통해 사회적응에 필요한 조언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내체류, 영주권·국적취득 관련 법령 안내 및 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와 ‘인권담당관제도’를 통해 결혼 이민자 상담을 활성화하고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청, 성인지적 중소기업정책 추진

중소기업청은 업종이나 규모, 생산품 등의 기준으로 기업을 구분하던 것에서 나아가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보고 성(性)에 따라 다른 요구를 반영하는 ‘성인지적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한다고 8월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정책수립 단계부터 지원시책이 남성이나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차별이나 불이익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여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여성특화분야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여성이 전체 인구의 50.1%로 절반을 넘어섰고 여성기업 증가율이 남성기업을 앞서고 있으나, 정책수혜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협조를 받아 중소기업정책에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로 여성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의 16.2%를 차지하나 주요 정책참여율은 자금지원사업이 7%, 기술개발사업은 5.2%수준에 불과하며 기술력 있는 벤치기업의 여성기업 비율은 3%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차별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차별관행의 조사를 분석해 여성 특화업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기술혁신개발사업·쿠폰제컨설팅지원사업’을 올해의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하여 여성차별요소를 검토하고 정책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격년 주기로 ‘여성기업실태조사’를 실시해 남녀 차별적 관행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성특화 업종에 대한 교육 및 창업지원을 강화해 여성에 유리한 재택형 여성특화업종의 창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 정부, 원정 성매매 수사 전담팀 구성 검토

정부는 8월 28일 최근 미국에서 사회문제가 된 한국인 여성의 성매매와 관련,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 안에 해외원정 성매매 수사 특별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의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한국인 여성 성매매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미 사법 당국 간 정기적 접촉을 통해 한국인 여성 성매매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내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유엔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중앙인사위원회, 2005 균형인사지수 평가결과 발표

중앙인사위원회가 8월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5년도 균형인사지수 평가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균형인사지수는 ‘보통’, 광역자치단체는 ‘미흡’으로 조사

됐다. 균형인사지수는 여성·장애인·과학기술직 인력에 대해 인사관리가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2004년에 개발된 지수로, 각 지표별로 1점이 '만점', 0.85점 이상은 '우수', 0.7~0.84점은 '보통', 0.7점 미만은 '미흡'으로 분류된다.

기관별 점수를 분석해보면 최고 점수는 0.85점, 최저점수는 0.36점으로 기관 간 편차가 컸으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여성 균형인사에서, 공공기관의 경우는 장애인·과학기술인력 활용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성과 장애인의 경우 승진·주요보직·교육훈련 등의 면에서 차별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광역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여성의 하위직 편중이 특히 심각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균형인사는 단순히 소수집단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에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반영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의 기본방향"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 긴요한 만큼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통계청, 2005 출생·사망통계 결과 발표

8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사망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15~49세의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전년의 1.16명보다 0.08명 감소했다. 이는 부부 1쌍이 아이 1명밖에 갖지 않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미국(2.05명), 영국(1.74명), 프랑스(1.90명), 독일(1.37명)은 물론 일본의 1.25명에 비해서도 낮다.

통계청 관계자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는 예측하기 힘들다"며 "OECD 선진국과 비교하면 다른 국가는 다 올라가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만 큰 폭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43만8천62명으로 전년보다 3만7천990명 줄어들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총 사망자 수는 24만5천511명으로 전년보다 300명 줄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19만2천600명을 기록, 처음으로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 자연증가는 1995년 47만3천명에서 2000년 38만9천800명으로 줄어든 뒤 2001년 31만4천500명, 2002년 24만8천100명, 2003년 24만7천700명, 2004년 23만300명 등으로 줄어왔다.

산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25~29세 연령층이 92.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의 104.6명에서 12.3명이나 감소하면서 처음 100명 밑으로 떨어졌다. 30~34세의 출산율은 82.4명, 35~39세는 19.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0.2세, 첫 아이를 낳는 산모의 평균연령도 29.1세로 이전에 비해 많아졌다. 산모의 연령별 구성에서는 30대 초반(30~34세)의 비중이 40.9%로 40.2%에 그친 20대 후반(25~29세)의 비중을 처음 넘어섰다. 출생아의 아버지 구성비는 30~34세가 49.8%로 가장 많았으나 35~39세의 비중이 22.5%로 높아지면서 25~29세의 비중인 19.9%를 처음 앞섰다. 출생아의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7.7명으로 10년 전의 113.2보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남아 선호도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

❖ 대기업 여직원, 여성 CEO 전망 불투명

경영전문지 월간CEO는 8월 30일 발간된 9월호에서 '100대 기업 여성 직원이 생각하는 CEO 드림(dream)'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여성 CEO는 몇 년 후에나 탄생할 것 같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8.6%가 10년~11년은 지나야 탄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불가능하다'는 답도 20.8%로 나와 대기업에서 여성 CEO가 탄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줬다. 14년~15년은 15.6%였으며, 5년 이하는 10.4%, 6년~7년 사이는 13.0%였다. '회사 내에서 자신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직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고경영자'를 꿈꾼 이는 겨우 2.6%에 불과했으며, 임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 이도 7.8%에 그쳤다.

출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의 배려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36.4%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보통이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각각 26.0%였다. 여성 직원이 지속적으로 회사를 다니기 위해 가장 해결되어야 할 육아 문제 해결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이 전체 응답자의 62.3%나 됐다. '육아 휴직 시행' 20.8%, '보육비 지원' 15.6%로 다음을 이었다.

최근 기업 내 여성 파워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실제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 여성의 결정권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31.2%는 '대체로 그렇다'고 말했다. '보통 수준'은 24.6%, '별로 그렇지 않다'는 29.9%였다.

한편, 회사에 다니지 않을 만큼 경제력이 보장돼도 직장을 계속 다닐 생각이냐는 물음에 71.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사회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92.6%로 높았다.